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경쟁 활성화 vs 요금인상

(통신업계)

(시민단체)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 가결

통신업계 3사 경쟁에 ‘요금 인하’ 소비자 ‘비싼 요금제’ 사업자 외면

시민단체 사업자 원하는만큼 인상 인가제 폐기 철회 촉구 기자회견



서울 강남구 SM타운 ‘케이팝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디지털 사인지에 5G 단말기 광고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만들 때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업체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해져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인지, 정부의 견제가 없어 오히려 통신요금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투표 결과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와 유보신고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통신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요금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자율 요금 경쟁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

적 사업자의 과도한 통신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휴대폰 요금제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KT는 시내전화 요금제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요금인가제는 오히려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제출하면, 다른 사업

자들이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는 일이 반복되자 요금 담합을 초래한다는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또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시장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후 정부는 2014년부터 요금인가제 폐지를 추진해왔고, 이제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돼 1위 사업자도 신규 요금제 내용을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새로운 요

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통신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인가제 폐지로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동통신업계는 3사간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독 비싼 요금제를 내는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도 외면받을 수 있어 오히려 통신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요금인가제 폐지가 가계 통신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여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가제 폐기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견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오히려 사업자가 원하는 대

로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SK텔레콤은 정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지만,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은 7만·9만·11만원대의 요금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제를 통해 반려되지 않았다면 최저 5만원대 요금제가 이란 7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금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요금인가제가 시장 자유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신고제로 바꾼 것”이라며 “유보신고제”는 신고 내용을 반려할 수 있는 특별한 신고제로 인가제 내에서 시장 자유경쟁을 조금 향상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요금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15일 내 반려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취업 취약계층에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고용부, 관련법률 의결... 내년 시행 진로상담·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대상자에 최대 6개월 300만원 지급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수급자격 인정서 및 구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하거나 경제 여건으로 취업이 힘든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이다.

## ◆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근거 마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로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으로 명문화했다. 또 이들이 적성·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다. 취업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등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자에 대한 진로 상담 등을 기초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지원 연계, 일자리 소개나 이력서 작성지원 등의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했다.

저소득 구직자, 18~34세 청년층 중

가구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 18~34세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중단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 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직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 보험설계사 등 ‘특고’는 빠져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돼 다른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한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술인 대상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된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 외 특고 종사자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특고 중 보험설계사 등의 가입 문제 논란으로 특고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고용노동부는 특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특고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9개 직종에 해당하는 약 77만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수 기자 hys@

# “너나 잘하세요” 軍-言 설전



문명철 기자의 국방 칼럼

변인은 “제대로 설명도 안 해놓고 당장 정정보도 한다 그래버리면 어떡합니까”라는 질의에 “정확하게 보도를 하셨으면 저희가 그러지는 않겠죠”라고 쏘아 붙였다.

대변인으로서 언론에게 바른 보도와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작 국방부 대변인실의 실수에 대해서는 정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드물었으니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2018년 6월 27일 ‘제2차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일’에 국방부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표기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기자가 국방부 입장을 물었지만, 당시 국방부는 답변이 없었고 기사가 올라간 뒤 외압으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이후 최 대변인과 국방부 대변인실의 대치는 “기자의 집으로 방문하겠다”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해당 기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국민청원으로 기사가 내려진 배경을 묻는 질의가 올랐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실은 기자가 국방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유족을 희롱하고 악의적이라 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삭제를 했다고 답했다.

군 당국과 언론 간의 ‘입전쟁’ 벌어진 모양이다. 보여주고 싶은 면만 전달하고 싶은 자와 보여주지 않으려는 면을 캐내는 입장차가 있으니, 종종 격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실측은 이번엔 내우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1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과 언론 기자들 간의 격한 설전은 정부e브리핑 영상과 언론보도로 퍼져나갔다. 문제의 발단은 기상악화로 19일 예정된 육해공 합동 화력 훈련이 다음달로 연기된 것을 두고 언론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보도에서 시작됐다.

최근 군 관계자들이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관련 기사가 나왔던 터라 국방부 입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더욱이 예정된 19일의 파고(파도의 높이)는 3~7m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최전방 해안소초장 시절 매일 매일 파고를 확인하고 전파했었는데, 3m 이상이면 육경정(육군의 연안 경비정)뿐만 아니라 해군의 함정들도 운항이 크게 어려워 악천후 조치가 내려졌다. 때문에 국방부도 삼은 내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질의를 한 기자의 발언을 들어 보면 군 당국은 ‘핑퐁식 질의’를 했던 것 같다. “국방부에 물어봐라”, “합참에 물어봐라”는 식의 떠넘기기에 지치지 않을 기자는 드물 것이다.

양쪽 모두 나름의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적정선이 있는 법인데, 최대

사실은 반대였다. 기사가 늦었지만 입장을 주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최 대변인은 “우리측(국방부) 실수인데 올라가면 안된다.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국방부의 홍보내용에 즐기게 지적을 해 온 기자는 지난 3월 돌연 ‘코로나 19’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사전통보도 없이 말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온화한 언론소통을 기대받았던 최 대변인 아니었던가. 언론은 군 당국과 입장만 다를 뿐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해줄 동반자지 입으로 전쟁을 벌리는 적은 아니지 않은가. /captinm@